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 政策 展望

1994. 7.

全 東 震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 目 次 -

I. 序 論	1
II. 무라야마 內閣의 成立 背景과 特性	1
1. 무라야마 內閣의 成立 背景	1
2. 무라야마 內閣의 特性	4
III. 무라야마 內閣의 對內外 政策 展望	6
1. 對內政策	6
2. 對外政策	9
IV. 무라야마 內閣의 對韓半島 政策	11
V. 韓國의 考慮事項	13

I. 序 論

- 일본은 하타 쓰토무(羽田孜) 총리가 1994년 6월 25일 내각총사퇴를 발표함에 따라 6월 29일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위원장을 총리로 하는 自民, 社會, 新黨사키가케 3당 연립정권을 출범시켰음.
- 무라야마 신내각 출범은 북한 노동당과 友黨관계에 있던 사회당의 위원장이 일본 총리로 취임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과 대북한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사회당은 최근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로 전환하였으나, 전통적으로 친북정책을 추진해 왔고, 북한핵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제재를 상정한 한·미·일 3국간 협조 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
- 本稿에서는 무라야마 내각의 성립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신내각의 구체적인 대내외 정책 및 대한반도정책을 전망하고자 함.

II. 무라야마 內閣의 成立 背景과 特性

1. 무라야마 內閣의 成立 背景

- 自民, 社會, 新黨사키가케 3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新保守主義 兩黨制를 추진하고 있는 오자와 이찌로(小澤一郎) 新生黨 대표간사에 대한 3당의 반감과 정권창출 욕구임.

- 사회당은 호소카와(細川護熙) 연립내각 당시(1993. 8. 7 - 1994. 4. 8) 연정내 제1당이면서도 오자와 대표간사와 이치가와 유이치(市川雄一) 공명당 서기장의 소위 「이치·이치」라인의 정책과 갈등을 보이면서 이들로부터 소외되었음.

- 또한 사회당은 신생당의 막후 실력자인 오자와 대표간사가 1994년 6월 25일 하타총리 취임 직후 신생, 일본신당, 민사당 등 5개 당파로 구성된 원내교섭단체 「改新」을 기습적으로 결성함으로써 사회당 분열을 유도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聯政으로부터 이탈하였음.

- 自民黨도 1993년 8월 신생당의 자민당 이탈로 정권을 상실한 이래 당내파벌에 대한 오자와 신생당 대표간사의 지속적인 포섭 시도로 분열 위기를 맞고 있었음.

○ 1994년 6월말 소수정권인 하타내각이 붕괴 위기에 이르렀을 때에도 오자와 신생당 대표간사는 사회당을 연정에 복귀하도록 회유하기 보다는 自民黨 보수파와 사회당 우파를 탈당하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보수주의적 다수파 정당을 만들려는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갔음.

○ 이러한 오자와 대표간사의 책략에 따라 일본정계는 무라야마 내각 출범을 계기로 이미 보수양당제로의 정계재편을 향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음.

- 6월 29일 실시된 중의원 총리 경선에서 자민당내 와타나베(渡邊 美智雄)파는 자민, 사회, 新黨사키가케가 공동으로 내세운 무라야마 후보 대신에 신생당의 오자와 대표간사가 자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 내세운 가이후 후보를 지지하였고, 사회당내 우파인 「데모크라츠」도 가이후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자민, 사회 양당이 모두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신생당의 국제적 역할증대 노력과, 자위권 범위의 확대해석 및 개헌논의는 정치·군사적 대국화를 반대하는 사회당과, 護憲을 다수 입장으로 하는 自民黨을 연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 하타내각을 주도했던 신생당은 「보통국가론」을 내세워 국제적 역할증대 및 유엔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북한핵문제를 계기로 대북제재 참여를 상정한 「有事立法」을 추진함으로써 평화헌법을 확대 해석하려 하거나, 개헌논의까지 활성화시키려 하였음.

- 이에 대해 사회당은 하타내각이 북한핵문제를 계기로 평화헌법을 개헌하려 한다고 보고 대북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유엔상임이사국 지위획득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평화유지군(PKF)에 대한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 지난 1955년 창당 이래 헌법개정에 반대하면서 「護憲平和路線」을

추구해 온 사회당으로서는 보수적인 신생당 보다는 오히려 리버럴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상이 주도하는 自民黨과 손을 잡는 것이 당의 기본방침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음.

- 한편 일본내에서는 냉전붕괴로 인해 이념에 대한 대립요인이 약화되었고, 관료들이 대내외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당 총리 등장이나 自民黨과 사회당간의 연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완화될 수 있었던 점도 3당연합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되었음.
- 결국 일본정국은 무라야마 내각 출범을 계기로 「自民 對 비자민」 구도에서 「오자와 對 反오자와」 및 「改憲 대 護憲」 구도로 바뀌고 있음.

2. 무라야마 內閣의 特性

- 무라야마 내각은 국회에서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정책 및 정국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자민당이 정권의 중핵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하타내각보다 안정된 정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신내각은 자민당이 외교·통산 등 주요 직책을 13석이나 차지함으로써 자민당 주도의 내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신내각에 참여한 3당은 중의원에서 전체의석의 60%인 302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연립정권임.

- 또한 무라야마 신내각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 내각 구성을 통해 자민·사회당간 정책 모순을 극복하려 하고 있음.
 - 첫째, 사회당 총리에 실력과 경험을 갖춘 자민당 주도의 실무형 내각을 구성하였음.
 - 둘째, 고노 오헤이(河野洋平) 자민당 총재,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新黨사키가케 黨首 등 자유진보적인 護憲派를 입각시켜 내각에 평화주의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였음.
 - 셋째, 외상, 대장상, 통산상, 방위청장관 등 주요 각료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중량급 인사를 포진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음.

- 그러나 무라야마 신내각도 약체의 선거관리 내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자민·사회·新黨사키가케 3당에 의한 연립내각은 政略的 이해를 기초로 결합되었지만, 안전보장문제나 세계개혁문제 등 기본적인 정책 측면에서 각당간의 입장 차이가 현격함.
 - 무라야마 내각은 자민당내 극우파와 사회당내 극좌파가 합석한 이질적 내각임. 구체적으로 무라야마 총리와와 다케무라 대장상이 북한에 대해 관용적인 평화주의적 입장이라면, 다마자와 도쿠이치로(玉澤德一郎) 방위청장관과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運輸相은 자민당내 매파임.
 - 향후 국회에서 소선거구 분할법안이 통과되어 정계가 선거체제로 돌입할 경우 각선거구에서 자민당과 사회당이 단일후보를 세우지 못할 것으로 보여 양당간 결별이 불가피할 것임.

- 또한 8월로 예정된 95년도 예산안 편성이나 세계개혁, 행정개혁 등의 논의가 본격화되면, 자민당은 과거 자민당정권 시대에 官界나 業界에 구축한 특권적 관계를 기반으로 추진하려 했던 정책들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政·官·業」의 유착 타파를 내세워 온 사회당이나 新黨사키가케와의 사이에 알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무라야마 내각은 「반신생·공명」 이외에 연립정권의 구심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점차 당파간 알력이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소선거구제 선거제도를 통한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신보수(舊연립여당세력+자민당내 보수적 개혁추진 세력+사회당내 중도 우파세력) 對 리버럴(자민당 주류파+사회당+사키가케) 이라는 양당제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됨.

III. 무라야마 內閣의 對內外 政策 展望

- 6월 30일 組閣을 마친 무라야마 연립내각(자민: 13, 사회: 5, 신당 시키가케: 2)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 정책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3당간에 갈등의 소지가 많음.

1. 對內政策

- 무라야마 내각은 대내정책면에서 소선거구 분할법안 문제 및 세계개혁 문제에 대처하여야 함.

가. 小選舉區 分割法案 問題

- 일본은 1994년 1월 29일 정치 개혁법안 통과로 1947년 이래 실시되어 온 중선거구제 선거제도를 포기하고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였는 바, 선거가 실시될 경우 보수양당제로의 정계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에서 300석, 비례대표로 200석을 뽑고 1인 2표제를 채택하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서 거대정당에 유리한 제도임. 따라서 과벌이 많은 자민당 및 사회당이 후보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분열의 길을 걸어 정계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무라야마 총리는 취임 첫 기자회견(1994. 7. 1)에서 다음 총선거는 새로운 소선거구제도하에서 시행하고, 소선거구 분할법안을 가을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총선거 실시를 위한 국회의 早期 解散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냄으로써 차기 총선거를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함.
 - 왜냐하면 소선거구 분할법안이 무라야마 신내각 재임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자민, 사회, 사키가케 각당이 내년 참의원선거나 중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치루기 위해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임.

- 이처럼 무라야마 내각은 소선거구 분할법안 및 기타 정치개혁법의 통과를 둘러싸고 연립내각내 3당간 갈등이 증폭될 경우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 稅制 改革 問題

- 일본의 稅制改革 問題는 호소카와 내각이 1994년 2월 3일 경기침체와 미국의 對日 경기부양 압력을 계기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매년 6조엔씩 3년간 감세하는 대신, 3년 후 「국민복지세」의 명목으로 소비세를 3%에서 7%로 인상하려는 구상을 제시한 이후 줄곧 제기되었음.
- 강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신생당 등 구연립 여당과 大藏省은 「국민복지세」를 명목으로 간접소비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세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국민복지세」를 정부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분류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해 사회당과 新黨사키가케는 세율인상의 근거를 정부가 제시하고 용도를 「복지」에 한정하지 않는 한 찬성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여 왔음.
 - 新黨사키가케 등 기타 정당은 간접소비세를 인상하기 전에 세출 삭감을 위하여 정부지출을 통제·삭감하기 위한 행정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향후 세제개혁이 추진될 경우 세제문제 및 행정개혁문제를 둘러싸고 연립내각내 정당간 및 여야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소기업주를 유력한 지지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 및 新黨 사키가케내에는 소득세 감세 및 소비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에 3당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음.

2. 對外政策

- 무라야마 신내각의 장기적인 외교전략은 「보통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정치·군사적 역할증대와 평화헌법의 개헌 논의까지 활성화했던 하타내각의 「대국 노선」과는 구분되는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무라야마 내각은 자민당내 護憲勢力과 연대하면서 평화노선의 온건한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임.
- 무라야마 총리와 고노 요헤이 부총리 겸 외상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문제와 관련,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지만, 아시아의 국가들로부터의 이해와 국내적 여론수렴을 거친 후에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해 적극 추진 입장을 취한 하타 前총리와의 분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가문제와 관련, 다마자와 방위청장관은 현행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의거 평화유지군 참가 동결

을 현행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지금까지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무라야마 신내각의 대외정책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및 유엔평화유지군(PKF) 참가 동결 해제 등 호소카와, 하타 전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정치 및 군사 대국화 노선과는 다른 평화주의적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이와 같이 군사대국화 노선을 부정한 신내각의 평화주의적 대외정책은 아시아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임.
 - 신연정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50주년에 즈음해 과거 전쟁 반성 및 장래 평화에 대한 결의를 국회결의안을 통해 표명하겠다고 천명하였음.
- 그러나 무라야마 신내각의 단기적인 외교정책은 유엔중심주의에 바탕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하였던 호소카와 및 하타 내각의 외교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됨.
 - 외교에 대해 경험이 없는 무라야마 총리는 대미외교에 능통한 고노 외상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통산상 등 자민당 출신 각료들을 내각의 대내외정책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미·일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중요시하는 등 일본외교의 지속성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됨.

- 무라야마 신임총리는 7월 1일 김영삼 대통령과 빌클린턴 미대통령과 가진 전화회담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해온 기존의 대한, 대미관계의 기본방침을 계승하고 북핵문제에 대하여 한·미·일 3국간에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임을 전달했음.
- 일본의 시장개방 및 대미 무역관계 전망과 관련, 무라야마 신내각은 내각내에 反美성향의 사회당 총리를 비롯한 이질적 세력을 포용한 과도적 성격의 약체정권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이며, 대미무역관계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미·일 경제협약에서 미국측의 협력을 얻기 어렵을 것이라는 우려가 외환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円高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IV. 무라야마 內閣의 對韓半島 政策

- 무라야마 내각 출범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및 대북한 정책은 상당부분 지속될 것인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무라야마 내각은 자민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약체 연립 내각으로, 한·미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외무관료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한반도정책 및 대북한 정책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임. 또한 자민당 출신 대외정책 담당 각료들은 한·미와의 기존 우호 협력관계를 중시할 것임.

- 둘째, 일본은 북한 핵문제를 자국 안보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일·북한간에는 전후보상문제, 과거사문제, 이은혜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현안문제로서 남아 있음.
 - 셋째, 냉전체제 붕괴 이후 사회당은 1993년 선거에서 참패하였으며, 이에 자극받아 사회당 정책노선을 보다 현실적인 노선으로 수정하기 시작했음. 이와 관련, 사회당은 「93년 행동강령」에서 한·일기본조약과 미·일안보체제를 인정하였음.
- 다만 북한핵문제 및 일·북한 수교문제와 관련, 북한의 노동당과 友黨관계에 있던 사회당 위원장의 총리 취임은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당이 하타 총리의 대북한 제재 참여 의사에 반대하면서 북한핵문제를 주변제국과의 협조 및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무라야마 내각은 북한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대북수교와 관련, 무라야마 내각은 미·북한 3단계 회담에서 북한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일·북한 수교협상 재개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무라야마 내각은 평화주의 노선에 따라 과거청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며, 전후처리의 일환으로서 대북수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임.

- 북한도 조선노동당과 우당관계에 있던 사회당의 위원장이 총리로 취임한 사실을 환영하면서 양당간의 지속적인 우호관계 발전 및 양국간 수교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음.
- 결국 일본은 북한핵문제가 미·북한간 협상을 통해 타결될 경우 무라야마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대북수교 협상을 한·미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미·북 고위급회담과 남북한정상회담이 실패하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평화주의노선을 지속해 온 사회당 및 사키가케와, 미·일관계를 중시하는 자민당과의 사이에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V. 韓國의 考慮事項

- 무라야마 내각이 국제적 역할증대보다는 평화주의적 대외정책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신내각 출범은 동북아 안보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한국은 일본에서 護憲, 비무장, 비핵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당 인사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일본내 평화주의적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지향을 견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회당이 재일동포의 인권이나 정신대문제, 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제2차대전에 대한 인식문제 등에서 자민당이나 신생당의 보

수적 인식과는 다른 전향적 인식을 갖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 한·일간에 민간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 및 전쟁 희생자 보상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차제에 해결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임.

- 한국은 북한 노동당과 우당관계를 유지해 온 사회당과의 교류증대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문제 해결 및 대외개방을 간접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임.
- 대북관계개선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무라야마 내각의 독자적인 대북한접근 시도를 견제하기 위하여 한·미·일 및 한·미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 對中政策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 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資 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
政策 展望

統一情勢分析 94-1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7月 日

發行日 1994年 7月 日
